

# “명절 오니 더 두렵다”...노동자들 ‘한가위 블루’

상여금은커녕 월급도 못받아...광주·전남 올 체불임금 588억  
해고·무급휴직 내몰리며 실업급여 수급 4만5428명으로 급증  
코로나 장기화에 명절 한숨소리 커지고 고용센터 발길 줄이여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앞둔 광주·전남 지역 노동자들의 한숨소리가 크다. 명절 상여금을 받기엔커녕, 고용주의 임금 체불로 명절 쇠는 걸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직장에서 해고 당하거나 무급휴직으로 월급조차 받지 못해 실업급여 상담창구를 찾는 노동자도 부쩍 증가했다. 이들에겐 돈 쓸 데가 많은 명절이 두렵기만 하다. 노동계는 임금체불·해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점에서 노동청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동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는 노동청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노동계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임금체불의 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사법처리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법정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해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유도하는 자연이자제 도입 ▲징벌적 부가금(손해배상) 제도 도입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빚을 돈도 못받고=OB공장에서 지게차 운반일을 하는 44명의 노동자는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부에 5억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이의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노동부에 최근 3년 간 임금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은 급여를 받았고 4대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데도, 실제 보험료는 체납됐다고 주장했다. 체불임금으로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이 아우성이다. 17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노동청이 파악한 광주·전남지역 체불임금은 올 들어 588억원(광주 318억원·전남 27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불임금 535억원(광주 278억원·전남 257억원)보다 53억원이나 늘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가정을 파탄 내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며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중대범죄”라며 “명절 때마다 이뤄지는 반쪽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로는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할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광주시 북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추석을 10여 일 앞둔 17일 오전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시민들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당장 6개월은 실업급여로 버틸 수 있겠지만 이마저 끊기면 더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1월부터 7월까지 광주·전남 실업급여 수급자는 4만 5428명(3471억원)으로,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실직자들이 상담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해 수급자 3만8854명(2569억)보다 16.9% 증가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에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진 현실이 더 두렵다고 입을 모은다. 담당지역 추어탕 전문점에서 8개월간 일했다는 송모(59)씨는 “코로나로 가게 형편이 어려워져 지난달 해고됐다”면서 “추석이 코앞인데, 가족들 얼굴보기가 민망하다”고 울상을 지었다. 송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고용센터

입구에 놓인 ‘오늘의 신규 일자리’ 목록 120개 일자리를 한참을 훑어보다 “내가 일할 만한 곳은 없는 것 같다”며 발길을 돌렸다. 일용직 근로자 유모(58)씨도 “몸이 안 좋아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서 “실업급여가 평소 벌이보다 적어 추석인데 아내를 볼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화순지역 이름나 갈비전문점에서 일했다는 정모(여·59)씨도 “꽤 알려진 식당인데 손님들이 없다 보니 해고됐다”면서 “식당들이 사람을 뽑지 않고 있어 일할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실업급여 상담창구를 찾는 실직자들 중에는 20대와 60대가 유독 많다. 코로나로 인한 청년 실업난과 퇴직자들의 재취업난이 특히 심각하다는 얘기다. 김다정 청년유니온 광주지부 사무처장은 “최근 코로나19로 해고되거나 무급 휴직을 강요받은 노동자들의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일용직 등 고용환경이 불안한 근로자들의 실업문제도 심각하고, 이들의 일자리가 곧 생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윤활유 제거 소홀 화재 부른 한빛원전 직원 3명 벌금형

원자로 펌프 시험 중 누출된 윤활유 제거 작업을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은 한빛원전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하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빛원전 직원 A(34)씨와 B(56)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C(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전 10시 20분께 한빛원전력본부 발전소에서 원자로 냉각재 펌프 기동 시험을 하던 중 윤활유가 누출됐음에도 윤활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관리자로서 윤활유 누출 사실을 보고받고도 현장을 점검하지 않고 청소 지시만 내리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당시 냉각재 펌프 전동기 교체 작업을 하던 한전KPS 직원들이 정비 과실로 누유가 발생했고 제거 작업도 한전KPS 직원들이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업무에 전동기 유지·보수 업무가 포함돼 있으며 한전KPS 직원들이 정비 업무를 담당했다고 해도 원자로 냉각재 계통 운전 등을 하다가 누유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그 위험성이 훨씬 중대해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로 윤활유가 흘렀을 가능성, 누유된 윤활유의 양 등을 확인해 제거에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음주측정 거부...항소심도 무죄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지난 2018년 8월 5일 새벽 2시30분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A씨 집 앞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차를 몰게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실이 없다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경찰들은 A씨를 막아서며 제지했다. 경찰은 대리기사가 차량 운전 중단을 장소가 아닌, 지하주차장에 차량에 있다는 것을 A씨에게 확인시킨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위해 A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지하주차장까지 임의 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치에 항의, 승강기에서 내리게 해달라며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하주차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3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진행된 음주측정 요구라 불응해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경찰관들이 A씨를 지하주차장까지 데

려가면서도 별다른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임의동행은 영장 없이 피의자를 이동시킬 수 있지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동행 과정에서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은 임의동행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A씨가 동행 요구에 대한 거절의사를 명시했는데도, 의사에 반해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갔다”면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의사에 반해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것은 ‘강제연행’에 해당되는데, 현행법으로 체포하는 등 수사상 강제처분에 대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구하라 재산분할소송 세번째 심문기일 종결

조간간 마무리 될 듯. 걸그룹 ‘카라’ 멤버였던 고(故) 구하라 씨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세 번째 재판이 열렸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17일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세 번째 심문기일을 개최했다. 이날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재판부 요구로 구호인 씨와 아버지, 소송 상대방인 구씨의 어머니도 법정 출석했다. 재판부는 법을 떠나 가족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해보고 오해를 풀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족

구성원 전원이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쪽 의견을 듣고 심문기일을 종결, 조간간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구씨 측은 상속소송과 별도로 친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구호인 씨는 동생 사망 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으나 구하라 씨가 9살 무렵 집을 떠난 친모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다. 구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 청원을 올렸고 승소하면 동생과 같이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송진탐에서 작업 중 추락 강진서 50대 노동자 숨져

강진에서 송진탐 선로 이설 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17일 강진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강진군 선진면 송진탐에 올라가 작업중이던 A(57)씨가 추락했다. A씨는 25m의 높이에서 떨어져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송진탐 선로 이설공사를 마치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 비에 젖은 계단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추락했다는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안전장비를 비롯,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열정  
꿈  
진리로 증명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 형 일: 2020. 10. 12(월)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